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효과적 육성 위해

서북권 핵심 발전축 구축 서남권 산업거점 확산해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공간적 발전전략 수립 필요

클러스터화 촉진 위해 입지적 특성 등 고려 실행전략 짜야

전북도 혁신성장산업의 효과적인 육성 성과와 확산을 위하여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공간적 발전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별 입지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6대 혁신성장산업(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원택 박사는 전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6대 혁신성장산업의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적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의 혁신성장산업은 타 산업 대비 전국 비중과 성장률이 높으며, 서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주권으로의 집중경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산업의 군집패턴 변화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연구원은 전북도 혁신성장산업의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집적지 강화하는 전주권(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주력산업 회복 및 대규모 투자가 추진 중인 군산권(군산, 새만금)을 양대 축으로 핵심 발전축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혁신성장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및 권역발전 체계 구성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거점이 양호한 정읍은 군집이 강화되는 스마트농생명, 첨단융복합소재를 중심으로 서남권 산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고창과 부안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

동남권의 경우 라이프케어 중심으로 새롭게 군집이 형성되는 남원을 중심으로 산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순창과 임실로 확산하는 권역 발전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산업거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은 지역 자원과 연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접근성과 집적도가 양호한 진안을 중심으로 무주와 정수로 이어지는 권역 발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혁신성장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적 특성과 산업별 가치사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입지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 획이며, 산업거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퇴진이 평화다”... 14차 촛불대행진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14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 ‘법정 기념일’ 되다

민주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날을 매년 9월 14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약 1,300개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부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침체 시기에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4일을 정부 제정·주관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 14일은 과거 최초 산업단지였던 한국수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정된 ‘수출산업단지 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높여 가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라며, “산업단지가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남원시의회, 탄소중립 실천 세미나

남원시의회 탄소중립 그림도시 만들기 연구회(대표의원 한명숙)는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신민정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를 주제로, 탄소중립, 자원순환과 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한 폐기물관리 개선, 재활용체계 개선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이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부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률, 전체면적 50%에 그쳐”

나인권 도의원, 미래산업국 행감사...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블레이드 결함도 지적

새만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률이 높을수록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86회 정례회 2차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새만금신재생에너지단지 저조한 분양률과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블레이드 결함으로 블레이드 교체공사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지의 분양률이 주변 부지 시세보다도 턱없이 저렴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분양 및 운영 조제 제11조에 의거해 조성원가가 정해졌으며 지방비 부담분(20%)이 적용돼 주변시세보다 저렴함에도 분양률이 지지 부진한 상태이다.

또 나 의원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 방문객 저조를 지적하며

다양한 방문객 유치를 위해 40억을 투입해 설치한 융복합 체험시설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블레이드의 반복된 교체를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은 “도민의 큰 기대를 모았던 부안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분양률 및 테마체험관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원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충원해야”

임승식 도의원 ‘의사 7명 사표 후 1년 반 동안 한 명도 충원 못해’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7명이 지난해 3월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현재까지 충원을 한 명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이 지난 11일 제386회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통해서다. 임승식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2021년 3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7명 사표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이후, 본 의원이 지난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충원을 촉구한 것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원되지 않았으며, 외상전문의 충원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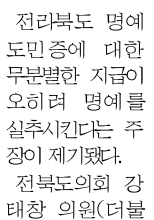
임 의원은 “원광대병원 측의 의료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권역외상센터 소속 외상전문의와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치료가 가능했느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며 “하루속히 전북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명예도민증 남발 사후관리는 부실”

강태창 도의원, 자치행정국 행감사

“무분별한 지급, 오히려 명예 실추시켜”

제주도, 명예 도민 대상 예우 강화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에 대한 무분별한 지급이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은 2022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남발하며, 정작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나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창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는데, 현재 명예도민증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수습 사무원들을 비롯해 지검장, 법원장, 그밖에 공공기관장 등 전라북도도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들 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도정기여에 대한 박연한

기대감으로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은 또 명예도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명예도민들의 현재 주거지, 주요 동정 및 동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우 또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귀빈예우, 도내 일부관광지 무료입장 등 소수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료 감면(50%), 도 특산품 발송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의 명예도민 사후관리 수준으로는 도정기여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예도민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 및 예우 강화가 필요하고, 명예도민으로서 전라북도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나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매년 명예도민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청된 명예도민들에게 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SJ 산림조합 60주년 SJ무주군산림조합 산림청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세금 혜택

- 양도소득세(국세) -

Q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보전산지는 경영 기간에 따라 10~50% 감면

Q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감면대상**
 - 경영기간 동안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결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임업인*
- 자경범위**
 - 보전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자경기간**
 - 산지를 양도하려는 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기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금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YouTube에서 "산림조합중앙회" 검색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전자책 > '세금' 검색 > 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혜택을 참조해주세요

영상 보러가기